

발주 2천억 감소 건설업계 수주난

종합건설 계약액 2조2,065억여원 - 전년比 7,746억여원 급감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의 계약액과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올해 지역업체 수주물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계약액은 2조2,065억900만원으로 전년 2조9,811억3,000만원보다 7,746억2,100만원이나 줄어 들었다. 2014년 계약액이 2013년의 4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계약액이 줄어들며 올해 도내 업체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쳐 건설업계 전체 수주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계의 경우 지난해 기성액이 전년 대비 78억1,700만원 줄어든 2,491억4,600만원에 그치는 등 수주실적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건수도 524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도·시·군 및 도내 유관기관의 전체 건설공사·설계용역 발주금액이 전년 보다 2,000억여원 줄어든 4조원으로 집계돼 수주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처럼 수주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형공사와 철도·도로 등 각종 SOC사업 발주가 마

무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년 내에 각종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도내 업체의 수주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공공공사 물량 확대, 지역업체 보호제도 활용, 수주물량 증가를 위한 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중소건설사는 대규모 공사의 참여율은 낮고 민간공사 물량이 적어 공공공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현재 마련돼 있는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실적공사비’ 배제 업계 숨통

강릉 올림픽 선수·미디어촌 5월 공사 착수

300억 미만 공공 공사 중 100억 미만 적용 폐지

■LH 올림픽사업단
유천지구 67만㎡
2017년 완공 예정

강원도내 지자체와 교육청이 9월부터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8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계약예규)을 공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향후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으로 활용될 예

지기로했다. 다만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공사비 배제 연장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재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공사비 산정시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지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원이 투입돼 오는 2017년까지 3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조성되고, 민간에 분양하는 공동주택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올림픽 이후 임대주택으로 서민들에게 분양된다.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활용 후 분양 전환하거나 영구·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 공공분양, 분담 임대 등 4개 임대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LH 올림픽사업단 관계자는 “국토부와 강릉시 등에서 관련 사업 승인 절차를 밟으면 늦어도 6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며 “2017년 말 완공 예정인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다시 활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릉/김우열 woo96@kado.net

만점구간 축소

(균형가격의 97%~99%로)

중심제 '가격평가' 투트랙

단가심사 폐지

(입찰총액만 평가, 덤핑 방지)

시범사업 심사기준 윤곽
대형사 수주편중 방지
'시공여유율' 평가 신설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심사 기준이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가격 평가를 투 트랙으로 가동하고 수주독점 방지를 위한 시공 여유율을 도입하는 게 큰 줄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적용할 특례 운용 기준 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가격 평가기준을 다소 조정하는 방안과 단가 심사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가격 평가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중전에는 가격 평가 때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에서 균형가격의 97% 사이에 해당될 경우 만점을 부여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만점 구간을 균형가격에서 균형가격의 99%로 축소할 계획이다. 가격 점수의 만점 구간을 좁혀 가격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입찰가격에 대한 단가 심사를 없애고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총액을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실효성이 낮은 단가 심사를 폐지하고 입찰총액을 가격 평가에 활용해 덤핑입찰을 방



가장 빠른 봄 손님 '영춘화' 8일 오후 청주 도심 주택가에 봄을 알리는 전령으로 알려진 영춘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시범사업의 30% 정도를 단가 심사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 건설사에 수주가 편중되는 쏠림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공 여유율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 종합심사낙찰제 하에서 중견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에 비해 시공실적이 부족해 수주 가능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미 수주한 공사의 견수와 금액을 점수화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수주한 공사 견수와 금액이 많을 수록 낙찰 가능성을 떨어뜨려 수주 독점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때 수주 견수와 수주 금액은 모든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공종과 공사 규모 등에 따라 선별적인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따른 평가 항목도 도입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다.

기재부가 최대 4개 정도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

각에서는 시공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몸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 기준을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의 특례 운용기준에 반영해 서둘러 발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단가 심사를 폐지하고 시공 여유율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낙찰자 선정기준의 장단점과 수주독점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